

2026년 가온시 청년 정책 종합 계획 (발췌본)

원본 보고서 「가온시 청년 정책 종합 계획 — 청년 정주·일자리·문화 통합 추진안」 총 64쪽 가운데 1~7쪽 발췌. 정책 보고서 요약 학습을 위한 5묶음(배경·쟁점·대안·결정·출처) 매핑이 자극되는 구조로 정리.

I. 정책 배경

가온시 인구는 2018년 정점 이후 5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청년(19~34세) 인구는 2018년 81,200명에서 2024년 68,400명으로 약 15.8% 감소했다. 청년 순유출(전입 대비 전출) 규모는 2024년 한 해에만 4,200명에 달했고, 이는 인접 광역시·수도권으로의 일자리·주거 이동이 주된 사유로 분석된다.

청년 인구 감소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업·세수·소비·문화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온시 산업 구조가 제조·서비스업 중심이라 청년 노동력 부족이 산업 활력 저하로 직접 이어지고 있다.

주요 통계

- 청년 인구: 2018년 81,200명 → 2024년 68,400명 (▲15.8%)
- 청년 순유출: 2024년 4,200명 (전년 3,800명 대비 ▲10.5%)
- 청년 1인 가구: 2024년 21,300가구 (전체 청년 가구의 47.3%)
- 청년 평균 월세 부담률: 가처분소득 대비 38.2% (전국 평균 32.4%)

청년 가구 부담은 주거뿐 아니라 의료·문화·자녀양육 등 다영역에서 누적되고 있어 단일 정책이 아닌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부서 내부 의견이 모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 우선순위는 5장 「추진 우선순위」에서 다룬다 (본 발췌본에는 미포함).

II. 쟁점 분석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를 거친 결과 다음 세 가지 쟁점이 핵심으로 부상했다.

쟁점 1. 주거 지원 우선 vs 일자리 지원 우선

청년 순유출의 주된 사유에 대해 부서 간 시각이 다르다. 주택정책과는 「주거 부담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고 분석한 반면, 산업진흥과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양 의견 모두 시민 설문 결과에 일부 근거가 있어 단일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다.

쟁점 2. 직접 지원금 vs 환경 조성

직접 지원금(주거·교통·생활비 보조) 방식은 효과가 즉각적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환경 조성(주거 인프라·창업 공간·문화시설) 방식은 효과가 늦지만 구조적 변화를

이끈다는 의견이 있다. 두 방식의 예산 배분 비율도 합의되지 않았다.

쟁점 3. 청년 정의 범위

본 정책의 「청년」 정의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만 19~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만 39세 또는 만 49세까지 확대하고 있다. 가온시 청년 정의 확대는 정책 대상 규모와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쟁점별 시민 의견 (2024년 설문 결과 발췌)

가온시 「2024 청년 실태조사」(시민설문 1,200명)에 따르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시민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포한다. 다만 응답자 연령·소득별 편차가 커 단일 결론으로 환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석 단계에서 지적되었다.

- 주거 부담 완화를 1순위로 선택: 42.3% (특히 25~29세에서 51.8%)
- 일자리 지원을 1순위로 선택: 31.8% (19~24세에서 38.4%)
- 문화·정주 환경 개선을 1순위로 선택: 14.5%
- 「정책 자체에 관심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11.4%

주거 부담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약 60%가 「월세 부담」을 핵심으로 응답했고, 나머지는 「전·월세 보증금 부담」과 「이주 비용」을 꼽았다. 이는 직접 지원금 방식의 효과 추정에 활용될 수 있다.

부서별 검토 의견 요약 (내부 협의 결과)

주택정책과·산업진흥과·문화관광과 3개 부서의 의견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 부속서 1·2에 부서별 상세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본 발췌본에는 미포함).

- 주택정책과: 「대안 A를 최소 2년 시행 후 효과 측정 권고」
- 산업진흥과: 「대안 B의 1단계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우선」
- 문화관광과: 「대안 C 통합 패키지 중 청년 문화공간을 1단계에 포함 권고」

※ 부서 간 우선순위 차이는 시장 주재 회의에서 조정되며, 본 보고서 4장 「결정 사항」에 최종 결과 반영.

Ⅲ. 대안 검토

쟁점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정책 패키지 대안이 검토되었다.

대안 A. 주거 중심 직접 지원

- 청년 월세 직접 지원 (월 20만 원, 12개월): 200명, 연 4.8억 원
- 청년 전·월세 보증금 용자 이자 보전: 100명, 연 2억 원
- 신혼·창업 청년 우선 지원: 가점 부여
- 예상 효과: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다만 일자리·문화 영역 변화는 제한적
- 예산: 약 7억 원 (연간)

대안 B. 일자리 중심 환경 조성

-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신설 (2027년 개관): 초기 투자 12억 원
- 청년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운영: 연 2억 원
- 지역 산업체-청년 인턴십 연계: 연 1.5억 원
- 예상 효과: 중장기 일자리 창출. 단기 효과는 제한적
- 예산: 초기 12억 원 + 연 3.5억 원 운영비

대안 C. 통합 패키지 (주거+일자리+문화)

- 주거 지원: 대안 A의 60% 수준
- 일자리: 대안 B의 70% 수준
- 문화·정주 환경: 청년문화공간,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콘텐츠 지원 등 신규 영역
- 예상 효과: 다영역 동시 접근. 다만 영역별 효과가 분산될 위험
- 예산: 초기 8억 원 + 연 9.5억 원 (대안 A·B 중간)

IV. 결정 사항

시장 주재 정책 회의(2026-03-15) 결과 「대안 C 통합 패키지」를 본 정책의 기본 골격으로 채택했다. 다만 영역별 효과 분산을 막기 위해 다음 세부 결정 사항이 함께 합의되었다.

- 1단계(2026): 주거 지원 +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우선 시행
- 2단계(2027): 청년 창업 공간 개관 + 문화·정주 환경 조성 본격화
- 3단계(2028): 1·2단계 평가에 따라 정책 재조정
- 「청년」 정의는 현행 청년기본법(만 19~34세) 기준 유지. 정의 확대 여부는 1년 운영 후 재검토 예정
- 예산은 2026년 7억 원, 2027년 12억 원, 2028년 본예산 심의 시 결정

본 정책의 영향·효과 측정 체계는 본 보고서 6장 「평가 계획」에서 다룬다 (발췌본 미포함).

V. 출처 및 참고 자료

통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8~2024 (가온시 행정구역 기준)
- 가온시 「2024년 청년 실태조사」 (시민설문 1,200명, 95% 신뢰수준)
- 한국청년정책연구원 「2024 전국 청년 가구 부담 분석」 (2024.12)

법령·조례 근거

- 청년기본법 (2020.8.5 시행)
- 가온시 청년 기본 조례 (2022.3.1 제정)
- 가온시 주거 안정 지원 조례 (2024.7.1 시행)

비교 사례 (별첨 4장 정리)

- 광역 A시: 청년 주거 지원 (월 25만 원, 6개월)
 - 광역 B시: 청년 창업 통합 지원 (초기 자본 + 멘토링)
 - 광역 C시: 청년 문화공간 운영 (대학·지자체 공동)
- ※ 참고 사례는 「29-1_사례_모음」 별도 자료로 정리 (다른 실습 참조).

내부 검토 자료 (시청 미공개)

- 가온시 산업진흥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2025.11, 내부 검토용)
 - 가온시 주택정책과 「청년 주거 부담 시뮬레이션」 (2025.12, 내부 검토용)
- ※ 내부 검토 자료는 외부 공개·인용 시 사전 결재 필수

VI. 향후 추진 일정 개요

본 보고서 채택 후 단계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정은 본예산 심의 결과와 부서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단계 (2026년 하반기)

- 2026년 7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차 모집 (200명 규모)
- 2026년 8월: 청년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착수
- 2026년 10월: 1차 효과 모니터링 (신청 규모, 만족도)
- 2026년 12월: 1단계 운영 결과 평가 + 2단계 세부 계획 확정

2단계 (2027년)

- 2027년 3월: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설계 발주
- 2027년 6월: 청년 문화·정주 환경 조성 사업 본격화
- 2027년 11월: 청년 창업 공간 개관
- 2027년 12월: 2단계 운영 결과 평가 + 3단계 재조정 방안 마련

3단계 (2028년)

- 2028년 상반기: 1·2단계 평가 종합 + 정책 재조정
- 2028년 하반기: 「청년」 정의 확대 여부 재검토 + 2029년 정책 골격 결정

※ 본 일정은 보고서 채택 시점 기준 일정 개요이며, 본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세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
평가 지표 등 상세 항목은 본 보고서 6장 「평가 계획」 참조 (발췌본 미포함).

작성자 메모

- 본 발췌본은 5묶음(배경·쟁점·대안·결정·출처) 매핑 학습용으로 정리. 각 묶음에 핵심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요약 시 추출 필요
- 「예상 효과」, 「1단계」, 「추가 확인 필요」 등 모호 표현 일부 포함 — 요약 시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 권장
- 6장 「평가 계획」, 5장 「추진 우선순위」는 본 발췌본에 미포함 — 요약 시 명시
- 내부 검토 자료 인용은 사전 결재 필수 — 요약본에서 출처 표시 시 주의

【보안 주의】 본 자료는 교육용 가상 더미자료입니다. 실제 기관자료,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는 AI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결과물은 담당자가 최종 검토합니다.